

법원에 한마디 못 하면서... 野, 심우정에 화풀이

“尹대통령 석방 지휘 책임 묻겠다” 고발·탄핵 등 총공세
與선 “李대표 재판 코 앞에 닥치니 검찰만 공격” 비아냥
야권선 “沈총장 공세” 맞서 억지 수사 오동운 고발키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야권이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재차 탄핵 카드 등을 꺼내며 심 총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정작 법원에는 한마디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 표는 정작 (윤 대통령 석방)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주야장천 검찰만 공격한다”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들고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등 혐의로 네 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10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근택·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옹혜인 의원 등은 회견에서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이라며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했다.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우정·김기표·이성운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향의 방문하고 심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의 범법적 견해를 묵살한 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BBS라디오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법을 풀어준 오명여의 역사가 어디 있나”며 “헌법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사유라는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권한이 법원에 있기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수사팀·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심 총장 공세에 맞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불법 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

	여당	야5당
피고발인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처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배경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 지적 등 불법 행위 주장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 시간지체 등 혐의 제공 및 특별수사팀의 항고묵살 석방지휘
주요혐의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회에서의 중안강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불법지시 등 직권남용, 직무수행방해 등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오 처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수처를 겨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를 ‘범죄집단·조직폭력배·적폐’ 등에 빗대며 “(오 처장은)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필요한 건 일감이 아닌 폐지”라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尹석방’에 기세 오른 與
의협 등 지지층 복귀도모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대한의사협회 면담을 통해 의료를 달래고 떠난 지지층 복귀 도모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사회 회장과 국회에서 50여 분 동안 비공개 면담했다. 여당 측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배석했다. 권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듣는 자리였다.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구체적 얘기부터 모든 쟁점에 대해 다 얘기했다”며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전공의들이 이달 말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이였다. 복귀 거부 시에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예정대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는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의 과대학장협의회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지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의협 반응은 싸늘했다. 10일 의료계에 의하면 8일 열린 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오세훈 겨누는 檢... 강혜경 재조사



검찰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명태군 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납 의혹을 추가로 조사했다. 오 시장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박찬구 정부특보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군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 검사)에 참고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오 시장은 명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출석에 앞서 “명씨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캠프 차원에서 명태군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후 관계를 단절한 사실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오세훈 캠프에서 활동했던 참모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명씨 관련 의혹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 후원자이자 지인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고 주장 중이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다. 검찰은 김씨가 명씨 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동자동 및 제주시의 김씨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군 의혹 전담수사팀은 10일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조사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5일에는 창원지검에서 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여섯 시간 가량 조사했다. 강씨 측 정승구 변호사는 “오늘 강씨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조사받았다”며 “오 시장이 반론했던 내용에 대해 저희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질문도 다수 있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했다. 강씨는 “(오 시장과 명씨가) 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식당 이름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계란 반숙에 간장을 얹어 먹었다는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어 검찰에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 명씨와 김씨 사이에 벌어진 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 중이다. 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뭇·明, 세 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아”
“명의 부정한 수법 확인 후 관계 단절”



황규석(왼쪽)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사회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면담한 뒤 나오는 모습. 오른쪽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연행뉴스

『재일 한국인 유지 일동』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우리 재일 한국인 유지 일동은 과거 수년간 양국 관계 악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래 지난 한 해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사상 최대인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을 능가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제야 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 체포 및 구금 현상이 전세계로 생중계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은 깡그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의 편법 영장 발부·헌법 재판소의 불공정한 심리 진행 등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잡범만큼 못 못한 부당한 처사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조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법치 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하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념적·정파적 접근을 중단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현재의 독선과 편법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라!

하나, 선진국 중 유일한 상설 헌법기관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부정선거를 막기는커녕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중국·북한에 의한 국내 여론조작 공작 활동을 저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모든 사법부 구성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고 오로지 법률과 도덕적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되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라!

-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재일 한국인 유지 일동 -